

수리할 권리 관련 입법동향

□ 해외 동향

- (유럽) 에코디자인 법률에 수리부품 제공 의무 추가('19년 10월)
 - 6대 제품* 의무사항** 적용('21년 3월)
 - *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디스플레이, 용접기, 직판냉장고 등
 - ** 전문수리업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할 부품종류, 제공기간, 배송기간 명시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 관한 에코디자인 규정 신설 논의 중
-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등 25개 주는 수리할 권리 법제화 논의 중
 - 농기계, 의료기기, 소비자 기기 등 전 영역에 걸쳐 진행(참고)
 - 수리협회(Repair Association)는 입법 촉진을 위해 기초적인 법률 템플릿을 작성하여 공개, 시민 독려 활동 추진 중

□ 국내 동향

- 국회 입법동향

법률명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21.9)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21.11)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판매 거절 및 지연행위 금지 ○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설치·운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감소 목적 ○ 정부(환경부), 지자체, 제조사업자, 수리 사업자의 의무사항 명시
정부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위)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부품·매뉴얼·장비 유통 금지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설치·운용은 금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처)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생명에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제외사항에 관련 내용 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불공정행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중복운영 방지를 위해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소관위(과방위) 상정 (21.11.9)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 회의(2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소관위(환노위) 회부 (21.11) ○ 관련위(정무위) 회부 (21.11), 미상정

- 환경부 정책동향 (K-순환경제 이행계획, '21년 12월)
 - (에코디자인 강화)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내구성, 수리 용이성 및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설계 강화
 - (지침 마련)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지속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 생산·수입자의 준수사항* 신설 추진(~'23)
 - * ①예비부품의 제공, ②수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 (시범사업 시행) 판매량이 많고 폐기 주기가 짧은 일부 품목을 선정, 자발적 협약을 통해 사전 적용·검증('22~)

재활용소재 활성화에 관한 입법동향

□ 해외 동향

- (ESG) 국제 사회에서 ESG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대
- (유럽) 新순환경제 실행계획('20년 3월) 발표, 재생소재 적용비율 산정표준 제정('20. 4월), 재생원료 의무사용 강화('23년 적용예상)
- (미국) 재생원료 사용량 미션언 시, 공공조달 입찰제한('18. 4월~)
- (영국) 재생원료 30% 미만 사용 포장재 추가과세(1,500파운드/톤) ('22.1월~)

□ 국내 동향

- 국회 입법동향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되어('21.6월), 국회 소관위(환노위) 상정('21.9월)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21.9월)
 - * 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 * 법률안이 순환경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산업계의 부담 증가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
- 환경부 정책동향 (K-순환경제 이행계획, '21년 12월)
 - (의무사용)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종이·유리·철에서 플라스틱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제품까지 확대
 - (인센티브) 재생원료 사용시 폐기물부담금·생산자책임재활용분담금 감면('23~), 전자제품의 경우 감면실적 인정 재생원료 범위* 확대
 - * 현재, 폐전자제품에서 유래한 재생원료 사용시에만 부담금 감면

- (친환경설계) 제품의 내구성, 재생원료 사용비율, 재제조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자원효율 등급제(가칭)'를 도입, 제조기업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
 - * 유럽연합(EU) 자원효율표준 등을 참고한 제품별 평가 기준(내구성, 재제조 가능성 등) 마련

참고1

미국 수리할권리 관련 입법 현황

주	법률안	관련 제품
1. Arkansas	SB 461	농기계
2. California	SB 605	의료기기
3. Connecticut	HB 5255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기
	HB 5826	
	HB 6216	자동차
4. Colorado	HB 1199	자동차,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 (Class 2 휠체어 포함)
5. Delaware	HB22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기
6. Florida	S374	
	H0511	농기계
7. Hawaii	SB 760	의료기기
	SB 564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기
	HB 415	소비자 제품
	HB 226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기
8. Illinois	HB 3061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기
9. Kansas	HB 2309	농기계
10. Maryland	SB 412	
	HB 84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기
11. Massachusetts	HD 260	
	SD 199	자동차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
12. Missouri	HB975	농기계
	HB 1118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기
13. Minnesota	HF 1156	자동차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
14. Montana	HB 175	자동차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
	HB 390	
	SB 273	농기계
15. Nebraska	LB543	농기계
16. Nevada	AB 221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기
17. New Jersey	A 1482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기
	A 2906	농기계
18. New Hampshire	HB 449	가정용 기기
19. New York	S04104	자동차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
	S149	농기계
20. Oklahoma	HB1011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기
21. Oregon	HB 2698	자동차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
22. South Carolina	H 3500	농기계
23. Texas	HB 2541	의료기기
24. Vermont	H58	
	S67	농기계
25. Washington	HB 1212	소비자 기기